

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
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
- 호주 출장 보고서 -

2017. 8. 21 ~ 2017 8. 26

호주 출장 보고

1. 출장 개요

□ 출장 목적

- 복지 사각지대 및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정책 및 관련 제도 그리고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일선 복지현장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파악

□ 출장기간 : 2017. 8. 21 ~ 8. 26

□ 출장지역 : 호주 시드니 및 선샤인 코스트

□ 출 장 자 : 임완섭 부연구위원

□ 일정 및 활동사항

호주	행 선 지 (국가/도시)	방문기관/면담자	활 동 사 항
2017.8.21	호주/시드니	시드니 이동	
2017.8.22	호주/시드니	University of Technology, Sydney /Bronwen Dalton 외	○ 호주의 공공부조 및 사각지대에서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과 한계, 시사점 등 ○ 호주 사회보장제도 동향
2017.8.22	호주/시드니	CASS/ Henry Pen, 장선아 외	○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노인과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
2017.8.23	호주/시드니	University of New South Wales, Sydney (SPRC)/Bruce Bradbury	○ 호주의 빈곤실태와 대빈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,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(공공부조제도 중심으로)
2017.8.23	호주/시드니	UNSW, Sydney (SPRC)/Ilan Katz 외	○ 호주의 공공부조제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것이 사각 지대 해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파악
2018.8.24	호주/선샤인 코스트	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/Tim Prenzler 외	○ 호주의 복지 부정수급 특성 및 이에 대한 정책 대응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 파악
2018.8.25	호주/시드니	Relationships Australia/김지선	○ 사각지대해소 관련 민간부문(NPO) 역할과 고용복지 연계, 복지 일선의 대응 등 -Communicare Inc, Relationships Australia
2018.8.25	호주/시드니	호주리서치센터 /정용문	○ 호주의 사회보장제도(공공부조제도 중심)의 전개과정과 최근 현안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 등
2017.8.26	한국/인천	도착	

2. 주요 조사 내용

가. 사각지대

1) 인터뷰 질문과 내용

□ 복지 사각지대 유형 및 현황

- 복지급여 시스템의 문제점(공공부조 시스템상의 문제점)
- 사각지대 유형별·발생 원인별 현황

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운영 체계

- 사각지대 관리 체계의 변화와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
- 사각지대 관리 및 축소 전략
 - 사각지대 관련 조직(관련 추진체계)
 - 조직의 목표,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, 예산, 업무분야
 - 업무량(업무 부담), 복지담당자 재량권 등
 - 사각지대 해소 관련 활동
 - 예방과 사각지대 발굴 등 관리감독(조사방법, 관리방법 포함)
 - 사후관리 :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,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등
 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과의 연계
- 사각지대 해소 성과
- 향후 사각지대 해소 전략 및 활동 계획

□ 공공부조제도 전개과정에 따른 사각지대의 변화(확대, 축소 등)

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및 비영리단체의 역할

- 공공부조 및 사각지대에서 비영리단체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원봉사 등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한계 관련
-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노인과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와 이에 대한 공공부문간의 관계 등

□ 공공부조 제도의 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과 복지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망

나.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

□ 공공부조제도 관련 부정수급 유형 및 현황

- 공공부조제도 시스템상의 문제점
- 부정수급 유형별·발생 원인별 현황 등

□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체계

- 부정수급 관리 체계의 변화와 법적근거
- 부정수급 관리 및 방지 활동 : 관리 및 방비 조직(관련 추진체계), 부정수급 관리 활동 등
- 부정수급 억제 등 성과
-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전략 및 활동 계획

□ 공공부조제도의 전개과정에 따른 부정수급의 변화(확대, 축소 등)

3. 세부 내용

가. 호주 사회보장제도 개요 및 현황

□ 호주 사회보장제도 특징

- 호주 사회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지만 다른 선별적 복지국가들과 달리 대상 포괄성이 큰 광의의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를 특징으로 함.
- 사회보험의 기능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약하지만 이를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보완
-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최고수준(\$18.3)이며, 임금소득자 등 근로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높은 국가임

□ 복지 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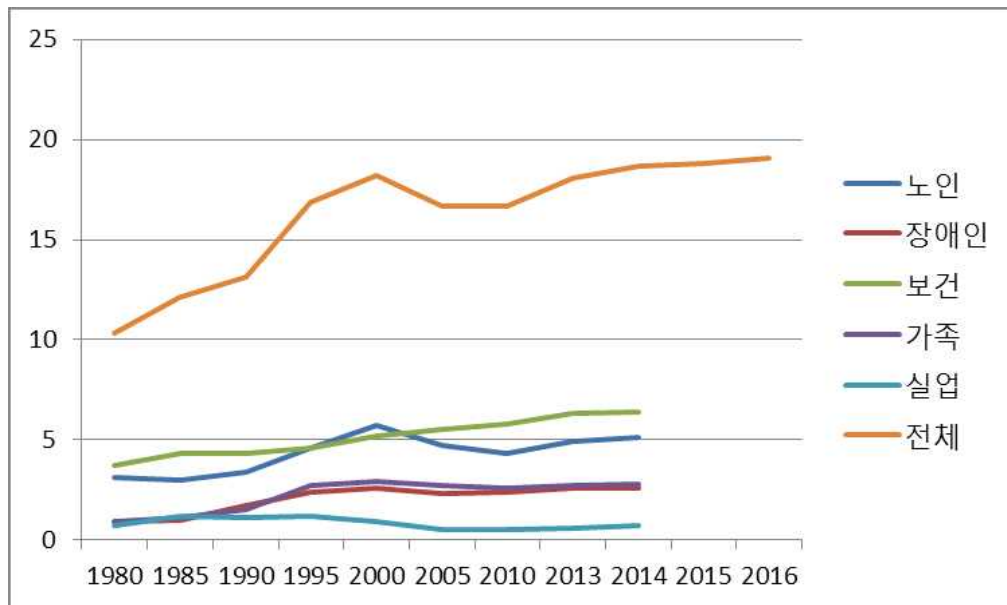
- 1980년대와 1990년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복지지출의 추이는 2000년대 초반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, 공공 지출은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기에는 보건비출과

노인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것임

-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16년 현재 19.1%로서 OECD 평균에(20.1%) 근접

- 보건 분야와 노인분야가 최근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족과 장애인 분야는 답보 상태, 실업 분야는 저지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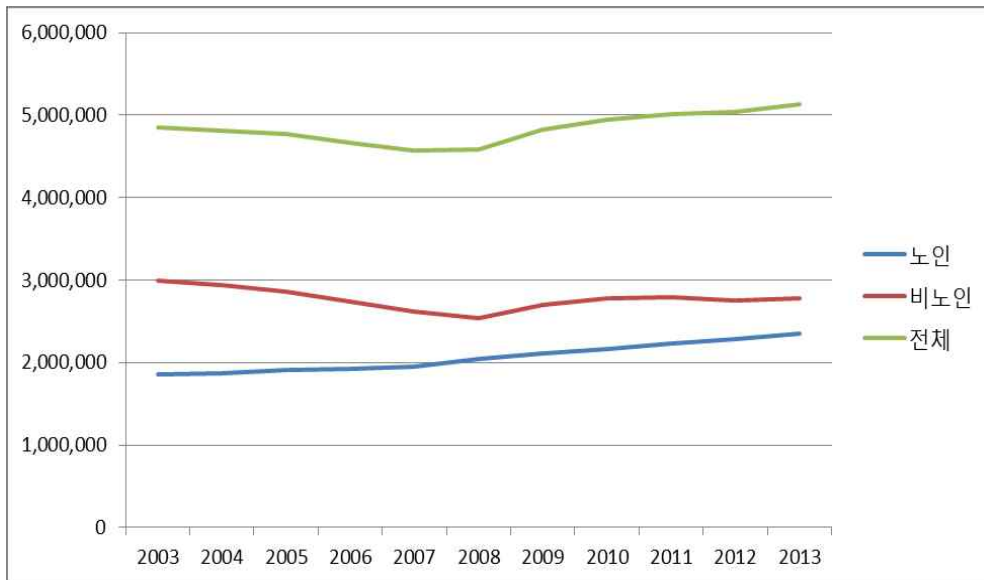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 (OECD 201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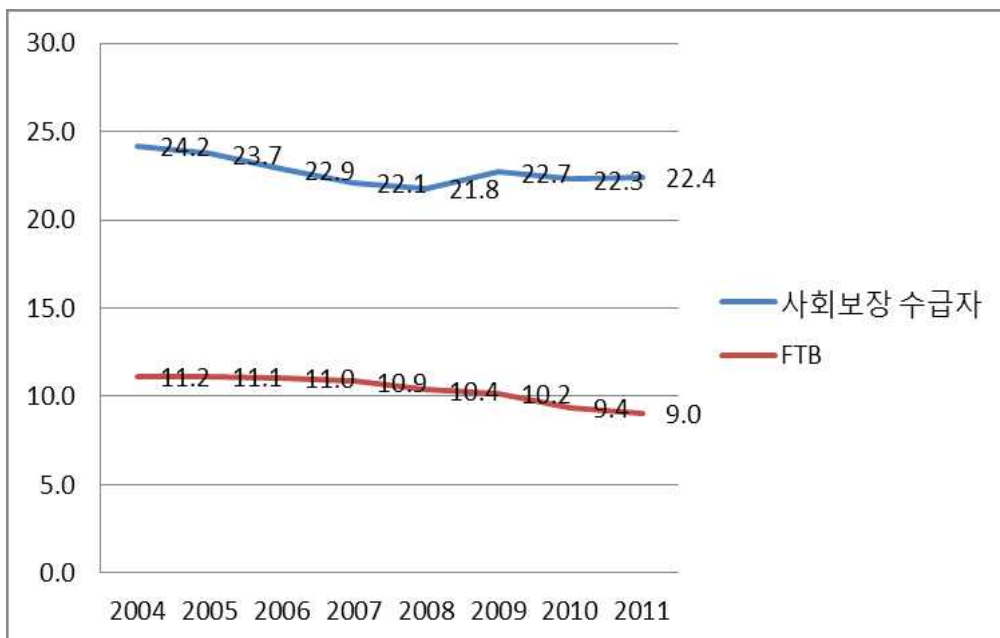
□ 수급자 추이

- 2013년 현재 사회보장 수급자는 총 5,139천명이며 (약 2,016천명의 가Family Tax Benefits 수급자 제외), 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
-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중 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반면 근로연령층 (working-age)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
- 총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, 사회보장 수급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, 가족 세제 급여 수급률 역시 감소 추세에 있음.

[그림 2]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수 (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)



[그림 3] 총인구 대비 사회보장 및 가족 급여 수급자 비율



나. 호주 사회보장제도 최근 동향

□ 복지 축소 관련 정치적 맥락

- 호주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몇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정당이 집권해 왔음.

- 1990년대 중반 보수당 집권 이후 반복지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오고 있음.
2007~12년 사이 잠시 노동당이 집권하였으나, 반복지 대항 담론 형성에는 실패했으며,
보수당의 재집권으로 복지는 축소 일변도
- 재정적자 극복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정부 재정 운영의 지상 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복지
지출 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공감의 성공적으로 확보
- 국가복지 축소 및 사회권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: “The
age of entitlement is over. The age of personal responsibility has begun” (Joe
Hockey, 2014년 연방정부 재무 부총리)

□ 주요 경향 1 : 근로연계복지 강화

- 1990년대 중반부터 상호의무적(mutual obligation) 복지 정책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호
주는 workfare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발달
- ‘급여를 위한 근로(work for the dole)’ 프로그램은 실업자에게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
교육, 훈련 및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
- 실업 관련 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및 구직 능력 향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(Activity
Test), 이에 실패할 경우 급여 삭감/정지
- 구직활동 증명에 실패하여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인구 존재: 2011-12년 현재 실업자
수는 614천명이며, 이 중 청년실업수당(Youth Allowance) 혹은 실업수당(New Start
Allowance)을 수령하는 자는 각각 71천명과 435천명임. 따라서, 약 십만명 이상의 실업
인구가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(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4).
- 호주 정부가 Workfare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함에
따라 실업 관련 급여의 적절성은 다른 급여에 비해 특히 낮음

〈표 1〉 주요 급여(주당)와 빈곤선 비교

대상	총 급여액(a)	절대 빈곤선(b)	격차(a-b)
실업급여	546.80	683.18	-136.38
노령연금(2인)	722.70	586.58	136.12
저소득 가구 (2자녀 가구)	776.06	959.25	-183.19

자료: Melbourne Institute 2014

□ 주요 경향 2 : 전달체계의 효율화

- 민관 협력(purchaser-provider split) 모델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비정부 기관에 역할 이임: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관리 역할만 담당하고, 고용, 보육, 노인, 장애인, 주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/프로그램 운영은 비정부 기관이 담당
- 사회서비스 전달의 시장화: 외주 기관간의 경쟁 시스템 도입(Goodwin and Phillips 2015)
- 센터링크 온라인 서비스 강화: 오피스 수와 대면 서비스를 감소시키고, 대신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 확대.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자와 문맹자 등 서비스 접근성 훼손. 오피스 및 전화 서비스 대기자 증가 및 대기시간 연장 등 센터링크 서비스 만족도 저하 (Belot 2017)

□ 주요 경향 3 : 부권주의적(paternalistic)복지 통제 강화

- 2007년에 호주 정부는 노던 테리토리(Northern Territory) 지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'소득 관리 (Income Management) 프로그램 시행: 급여가 '기본카드(Basics Card)'에 입금되어 급여 사용을 술, 담배, 도박, 포르노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 (Mendes 2013, Bray, Gray et al. 2015). 이후 소득 관리 프로그램은 다른 주에도 확대
- 사회복지장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시드니 서부 지역에 수급자 대상 무작위 약물 검사 시범사업 발표 약물 복용자로 판단될 경우 80%의 급여가 기본 카드에 입금되어 지출이 검역되며(quarantined), 집세, 보육 및 식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 (Norman 2017)
- 복지 사기 적발 활동 강화 :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복지 사기 신고 링크 설치 (Reporting Suspected Fraud)
- 자동화된 복지 사기 적발 시스템 (Automated Debt Recovery Program): 복지 사기의 대부분은 실제 소득의 미신고 및 과소 신고로 인해 발생.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센터링크에 신고된 소득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하여(로봇 추심 (Robo-debt)으로 표현) 복지 과대 지출 포착하고,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급자는 수급액을 반환

□ 주요 경향 4 :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접근 강화

- 호주 사회서비스는 소비자 주도 모델(Consumer-directed model)로 급속히 전환
 -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, 서비스의 유연성 제고 (DSS, 2015)
- 2015년부터 노인복지 서비스에 소비자 주도 모델(consumer-directed care) 도입
- 2016년부터 호주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 제도 (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) 도입 :

소비자에대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통제권 강화 (Buckmaster 2016). 개인당 연간 평균 39,600 호주달러가 할당 (Laragy 2016).

다. 호주 민간 부문의 역할

□ 호주의 고용-복지 연계 관련

- 실업수당은 높은 편이지만, 고용-복지 연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. 즉, 실업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, 구직 교육 및 훈련 활동 혹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해야 함.
 -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인 “Employment Support System”을 통해 복지수당 관련 모든 정보를 센터링크와 고용상담서비스기관이 공유. 출입국 관련 정보 또한 자동으로 연계되어 업데이트 되며, 실업수당 지급에 영향을 줌.
 - 하지만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받는 일에 종사하면서 센터링크 실업수당을 받는 부정수급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, 센터링크 및 고용상담서비스기관 상담사들은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기 상담을 진행하며, 호주세무서(Australian Tax Office)와도 긴밀히 연계를 유지하고 있음.
 - 다문화 국가인 만큼 센터링크에서는 다중언어(Multilingual) 서비스를 제공함. 특정 전화번호로 걸면 바로 해당 언어 통역사로 연결됨.

〈표 2〉 호주 실업수당(New Start Allowance) 요율

If you're:	Your maximum fortnightly payment is:
single, no children	\$535.60
single, with a dependent child or children	\$579.30
single, aged 60 or over, after 9 continuous months on payment	\$579.30
partnered	\$483.60 each
single principal carer granted an exemption from commitments for any of the following: • foster caring • non-parent relative caring under a court order • home schooling • distance education • large family	\$748.10

*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에 수당 요율이 조정됨.

○ Communicare Inc.

- Communicare는 1977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, 취약계층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며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음. 정부기관, 영리회사 및 비영리기관들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음.
- (비전) 미래의 창조(Creating Future), 핵심가치 : 지역사회 통합(Community Inclusion) 및 지역사회 안전(Community Safety)
- 제공하는 서비스 : 아동 및 가족 서비스(Children & Family Services), 문화서비스(Cultural Services), 교육 및 훈련 서비스(Education & Training Services), 고용서비스(Employment Services), 가정폭력 및 예방 서비스(Family Violence & Intervention Services)
- 인터뷰 대상의 직위 및 역할 : 전문 사례관리자(Specialized Case Manager)로써 고용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하였음. 센터링크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연계 관련 상담을 진행함.
- 고용연계 관련 해당 기관의 역할 및 주요 서비스 내용
 - Communicare는 호주의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는 고용상담서비스기관(Job Service Provider) 중의 하나이다. 이는 고용부(Department of Employment)의 Jobactive 프로그램의 하나로, 즉, 센터링크(Centrelink)로부터 실업수당(New Start Allowance)을 받는 사람들의 취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.
 - 모든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센터링크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.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각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고용상담서비스기관에 취업상담사와 연결되어 정기 상담을 진행함. 취업상담사 혹은 센터링크에게 구직자일지(Job Seeker Diary)를 2주 혹은 1개월 마다 일자리를 찾은 결과를 작성해 제공함.
 - 센터링크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총3개 단계(Stream A-C)로 분류됨. Stream A가 취업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없는 구직자이며, Stream C는 구직활동 방해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임. 여기에는 노숙인, 학대,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등도 해당됨.
 - 센터링크 혹은 고용상담서비스기관의 취업상담사가 구직자의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, 구직자분류도구(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, JSCI)를 통해 레벨 조정이 가능함.
 - Communicare와 같은 고용상담서비스기관은 센터링크와 구직자의 프로필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, 취업상담사와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구직자는 실업수당이 한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음. 취업상담사는 구직자와의 상담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, 이 기록에 근거하여 센터링크는 실업수당을 지급함.

- 구직활동이 끝난 사례의 경우, 상담 종료 후 26주 간 사후관리(Post Placement Support)를 진행, 사후관리상담자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정기적으로 연락
- 장애인 구직자의 경우, 장애인 고용서비스(Disability Employment Service)라는 부서에서 전문취업상담자를 고용해 관리함.
- 고용상담서비스기관의 취업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센터링크 및 콜센터를 방문해 그들의 상담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그에 맞는 목적을 수립하며, 서로 간의 효율성을 높임.
- 고용상담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부는 각 취업상담사에게 주요 성과지표(Key Performance Indicator)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각 취업상담사 및 상담기관 전체에 점수(Star Ratings)를 1에서 5까지 부여

□ 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

- 호주에는 가족과 노인 및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음. 이들이 부족한 정부의 사각지대 축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종속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.

○ Relationships Australia

- Relationships Australi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, 당시 참전용사들의 가족이 전쟁 속에서 겪은 많은 변화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. 1994년 이후, 업무의 범위를 넓혀 호주 내 가족들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시작했음.
- 호주 내 가장 큰 규모의 비종교 기관 중 하나로 다양한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
- (제공 서비스) 카운슬링 서비스(개인 및 부부), 가족 치료상담(Family therapy), 가족과 관계 교육 및 기술훈련, 아동, 청소년, 부모, 조부모를 위한 서비스, 중재 및 가족 내 분쟁 해결, 전문 가족 안전 프로그램, 아동 접촉 서비스 및 양육 명령 서비스, 가출 청소년 복지서비스, 지방의 호주 원주민 자녀 및 가정 센터의 발전과 전문가 역량강화에 공헌
- 이민자 영어교실 : 지역사회 내 도서관 혹은 커뮤니티 홀에서 이민자 관련 영어교실을 진행, 수강료는 무료. 한국인, 중국인, 베트남인 등 이민자들이 모여서 진행. 40~ 60대까지 다양한 연령 참여,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호주에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.
- 자녀교육 프로그램 : 혼스비(Hornsby)와 웨스트라이드(West Ryde) 지역 내의 한국 이

민자를 대상으로, 초등학교 자녀 입학 앞둔 아이들의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영어, 생활 규칙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, 부모들이 이민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영어교육,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 관련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.

- 학교 연계 프로그램 : 지역사회 내 약 20개의 초등학교와 중·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각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제공. 부모 연계 (Parenting Engagement) 프로그램도 진행, 학부모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

라. 호주의 부정수급 관리

□ 부정수급 현황

- 호주의 부정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까지 부정수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부정수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아래 표는 2010년대 이전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나타 내는 것으로,
 - 2009-2010년의 경우 수급자의 약 50%에 달하는 규정과 절차 관련 검토를 수행하였으며, 이를 통해 급여를 삭감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조치기 취해짐

〈표 3〉 Compliance and anti-fraud outcomes(2006-2010)

Year	2006-07	2007-08	2008-09	2009-10
Customers	6,500,000	6,520,000	6,840,000	7,20,00
Compliance reviews	4,276,281	4,431,309	3,867,135	3,506,431
Cancelled / adjusted down	628,705	702,624	641,504	575,715
Overpayments / debts from review	\$418,944,738	\$496,106,197	\$536,151,645	\$551,413,107
Prosecutions	3,400	2,658	3,388	3,461
Convictions	3,355	2,624	3,354	3,436
Amount involved	\$38,775,000	\$32,269,000	\$43,983,000	\$47,256,000
Fraud-related investigations	42,000	35,885	26,084	22,693

자료: Prenzler(2012, p.23).

- 아래표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최근에 이룰수록 부정수급(검찰의뢰와 기소, 유죄판결

건수)에 대한 조치 결과가 감소하고 있는데, 이는 전산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때문이라 할 수 있음.

〈표 4〉 Centrelink Fraud data customers ; 2007-08 to 2014-15

기간	Customers	Referred to GDPP	customers Referred to GDPP	Prosecuted & convicted	Customers convicted (%)
2007-2008	4,163,902	5,312	0.12	3,146	0.07
2008-2009	4,416,709	5,082	0.11	3,857	0.08
2009-2010	4,527,312	4,608	0.10	4,019	0.08
2010-2011	4,595,861	1,273	0.02	2,487	0.05
2011-2012	4,677,395	1,235	0.02	1,186	0.02
2012-2013	4,830,255	1,165	0.02	927	0.02
2013-2014	5,015,966	1,071	0.02	863	0.01
2014-2015	5,114,307	1,366	0.02	814	0.01

자료: prenzler(2016. p.194).

○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

- 호주의 경우 복지급여에 대해 ‘Department of social services’와 ‘Department of human services’는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을 위해 대규모의 무작위 표본 조사 수행(급여정확성 조사)
- 국민의 세 부담이 높은 수준인 호주에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
 -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뿐 아니라, 급여정확성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기소를 의뢰함
- 위의 표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를수록 검찰의뢰와 기소, 유죄판결 건수를 감소하고 있는데, 이는 전산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때문이라 할 수 있음.
 -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의 매칭을 통해 부정수급의 가능성 조사하는 방식임.
- 이러한 검찰의뢰와 기소, 유죄판결 건수를 감소에는 2011년부터 부정수급을 범죄예방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실시된 ‘early contact’ 시스템 도입 운영이 큰 영향을 미쳤음
 - 센터링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, 2011년 Centrelink의 직원들이 수급자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‘early contact’ 시스템 도입
 - 이 시스템의 주된 역할은 파트타임 취업이나 동거 가구원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격에 영

향을 미치는 변화를 알려주는 것임. 더 나아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고적 차원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감소시킴

- 이 방식의 도입에는 보다 더 많은 수의 잠재적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부정수급 기소에 있어 검찰이 보다 자세한 증거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작용함(prenzler, 2014, 2016).
- 호주의 경우 ‘early contact’ 은 물론 과거부터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전산망을 탄력적, 통합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음.
-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정보망뿐만 아니라 교육부, 보건부, 연방정부의 연금 부서, 이민자 관리국, 보훈부, 주 별 토지 관리 사업부서와의 정보망을 활용
- 현재의 급여와 수급자의 자격요건의 불일치를 찾아내는, 자동화된 데이터매칭 시스템이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되고 있음.
- 정식 명칭은 “데이터매칭 프로그램”이지만, 개인정보 DB를 활용한 과도한 관리로 인해 “로봇추심(Robo-debt)”이란 비판을 받고 있음.
- 이는 DB를 활용하여 파악한 소득과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신고소득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부채변상 편지가 발송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,
- 대상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정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계산오류가 20%에 달하여 수급자에 대한 존중이 부재하다는 비판과 함께 소득파악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